

## 2013도1390 뇌물수수 등 관련 대법원 보도자료

공보관(전화 : 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3. 10. 31. **A의 뇌물수수 등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상고**■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390 판결).

### I.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

■ 2006. 9.부터 2008. 3.까지 재정경제부 B 사무국장, 2008. 3.부터 2009. 12.까지

C 금융서비스국장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은,

- 2008. 9. 4.경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D, 감사 E를 만나 D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
- 2006. 7.경과 추석 무렵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D로부터 부산저축은행 관련 업무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각 100만 원을 수수함
- 2008. 추석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저축은행 감사 E가 “C나 J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민원이나 현안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설 무렵 서울 서초구 F 지하에서 G 회장이 같은 취지로 건네주는 200만 원을, 2009. 추석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 감사가 같은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합계 총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
- 2011. 1. 4.경 J 인사에게 부탁하여 2010. 12.말로 정해졌던 계열 은행 매각기한

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수수하여, J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

## II. 판결 결과 및 판시 사항

### ■ 2008. 9. 4.경 2,000만 원의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① 부산저축은행의 부회장 D와 감사 E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진술은 검찰 조사 당시 정관계 로비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심신이 심히 지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의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②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 인수는 J의 적극적인 인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그 인수 경위 및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이 당시 C 금융서비스국장이던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저축은행의 인수에 관한 편의를 요청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③ D와 E는 2008. 9. 4. J와 대전저축은행 인수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 함께 서울 출장을 갔고 실제로 그 출장 당일 J를 방문하여 대전저축은행 인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D와 E가 2008. 9. 4. 피고인을 만나야 하거나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나 되는 뇌물을 공여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D, E가 2008. 9. 4. 출장 당시 실제로 2,000만 원이 든 손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 운전기사 H는 당시 손가방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⑤ E가 D와 동행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들었다는 D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은 D가 대전저축은행의 소액대출채권의 서류를 전부 확인했고 이를 장기형 상품으로 개발하면 향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 인수 과정에 비추어 2008. 9. 4.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⑥ 피고인과 D, E의 각 당시 일정과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8. 9. 4. 및 9. 18. 21:00~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D과 E를 만났는지도 의심스러운 점(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이유 있음)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와 E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함

■ 나머지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범행에 관하여

①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② D, E, G 등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사정, ③ 달리 D 등의 금품 공여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함

### III. 이 판결의 의의

■ 이 사건은 C 금융서비스국장인 피고인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뇌물을 공여했다는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진술내용의 모순 및 당시 뇌물수수 장소에 피고인이 없었다는 현장 부재(알리바이)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뇌물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비록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으나, 이런 사정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가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므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

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